

09

조달·중소기업·산림

1.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현장 할인율 상향

조달청 자재장비과 ☎ 070) 4056-7237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신규 공급계약으로 현장 할인율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계약은 현장 할인율이 3.99%였으나 신규 공급계약은 5.74%로 상향되었고 Cash bag point 적립 1.1%를 합할 경우 6.84%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조달청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SK협약 주유소에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관을 제외한 자치단체 및 일반 공공기관은 매년 4월 11월에 Cash bag point를 나라장터를 통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안내

공공기관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동구매

- 추진배경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추진방안 (2012년 2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①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 시 행 일 2015년 12월 1일

2.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

조달청 쇼핑물기획과 ☎ 070) 4056-7273

조달업체의 계약체결 부담완화와 계약담당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효율적인 MAS계약을 위해 공고 및 계약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MAS 공고 및 계약기간은 원칙상 2년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하여 공고는 2년에서 10년,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100여 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이를 악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2016년도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연장

- 추진배경 조달업체 계약체결 부담 완화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경감
- 주요내용 ①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2년→10년) 및 계약기간 (2년→기본 3년) 확대
②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탈퇴 가능
- 시행일 2016년 3월 1일 시행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 1723호 2015년 11월 27일)

3.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조달업체의 인증부담 완화

조달청 쇼핑물기획과 ☎ 070) 4056-7273

조달기업의 경쟁력과 품질향상을 위한 인증은 유지하되, 인증의 과다 · 중복 요인은 제거하여 조달기업들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인증평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체계를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 · 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 또한,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의 평가점수를 기존의 10점, 6점에서 각각 7점, 3.5점으로 축소하고,
 - 2017년 1월부터는 2단계 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 평가대상 제외 인증: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016년도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완화

- 추진배경 인증의 과다 중복 보유요인을 제거하여 조달업체의 부담완화
- 주요내용 ① 기술항목 간소화 및 배점 축소
기존 (고도, 일반, 녹색 3분류), 배점 10점 → 변경 (고도, 일반 · 녹색 2분류), 배점 7점
② 대상 인증항목의 축소 (19개 → 11개), 2017년 1월 1일 시행
- 시행일 2016년 1월 1일

4.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조달청 토목환경과 ☎ 070) 4056-7254

(최저가낙찰제 개선)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50점~60점) 이외에도 공사수행능력(40점~50점) 및 사회적 책임(1점 가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 공사수행능력 : 시공실적, 매출액 비중, 배치기술자, 시공역량 등

※ 사회적 책임 : 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상생협력 등

-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의 시행에 따른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조달청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 추진배경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주요내용 ①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

② 낙찰자결정방법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가점 신설 및 확대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 070) 4056-6112

사회경제적 조직의 자생력과 지속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동일한 혜택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에 0.5점 가점 부여(신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지원

- 일 · 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0.5점 부여(신설)

서비스의 품질 · 생산효율 · 생산기술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의 적용을 받는 KS서비스분야의 KS서비스인증서 보유업체에 대하여 0.7점 가점 부여(신설)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추진 및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 고용노동부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0.2점 가점 부여하고 3년 일몰제 적용(신설)

중소기업청장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범위 확대

-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에 대하여만 부여했으나 벤처와 우수그린비즈에 대하여도 0.5점 부여(신설)

일 · 가정양립 정책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하여 가점 확대(0.5점에서 1.7점)

여성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가산점 확대

-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라 3년 미만 0.25점, 3년 이상~5년 미만 0.5점, 5년 이상은 0.7점에서 5년 이상~10년 미만 0.75점으로 10년 이상은 1점으로 확대
- (여성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 10%이상이고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0점에서 1.25(5% 및 5인 이상 0.5점에서 0.75점)으로 확대

(참고)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으로 2015년 12월 중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예정
2. 개정된 세부기준은 조달청 정보공개 업무별 자료 및 법제처 법령정보에서 열람가능

1. 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042) 481-8913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시근로자수 기준인 18개 업종, 2개 그룹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 2016년부터는 업종별 매출액으로 소기업 범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업 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15년 기준 (상시근로자)	개 편 (매출액)
제조업 (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50명	120억원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10명	
제조업 (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원
농업 · 임업 및 어업, 금융 · 보험업	10명	
출판 · 영상 · 정보서비스	50명	50억원
도 · 소매업	10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명	30억원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명	
보건 · 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원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10명	

2016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범위가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의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아울러, 왜곡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피터팬 증후군’을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며,
-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소기업 범위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2016년도 소기업 범위 개편 매출액으로 개편

- 추진배경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으로 개편
- 주요내용 소기업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정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10명 미만 → 매출액 10억~120억)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2.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 481-4569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달성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년 12월)

-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기술개발제품* 구매(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가 권장사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중기청과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무로 전환됩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13종) : 성능인증, 신기술(NET), 신제품(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구매조건부 R&D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중소기업용 · 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택품,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제품

이제 공공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고,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 대한 제품 판로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성장과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품 구매 의무화

- 추진배경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 및 기술개발의욕 고취
-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구매 권장사항
(개정)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구매 의무사항
- 시 행 일 2016년 1월(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중)

3.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 481-4382

2016년 1월부터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FTA 취약분야 전용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중 FTA 체결로 본격적인 교역 증가가 예상되나,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 취약한 일부업종이 발생하여 동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6개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자금을 신설(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內 별도 편성)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 <한·중 FTA 발효 후 단기 생산감소 업종> 전기·전자, 섬유, 생활용품,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제약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지원정책 > 금융 > 지원정책 상세보기

한·중 FTA 전용자금 지원 조건

구분	용자규모	용자범위	지원대상	비고
신성장기반 (산업경쟁력강화)	300억원	시설	6개 취약부문 관련 업종	• 용자한도 10억원 • 생산설비, 시험장비 등
재도약지원 (사업전환)	260억원	시설, 운전		-
긴급경영안정 (일시적경영애로)	50억원	운전		-

1. 특허청, 대만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확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 481-5135

특허청은 2016년 1월 1일부터 대만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회원국에 후속 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소급인정 받기 위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지만, 대만의 경우 WIPO 회원국이 아니어서 출원인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 이에 한-대만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2015년 6월),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양 특허청 간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함으로써, 기존의 서면 처리·전자화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출원인 편의와 행정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한-대만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우선권 증명서류 서면 제출에 따른 출원인 불편 및 행정 낭비
- 주요내용 한-대만 특허청간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를 통해, 출원인의 우선권 증명서류 서면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및 행정비용 절감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1.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 481-4141, 4215 | 산림휴양치유과 ☎ 042) 481-4211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여가 수요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은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에서만 허용되었으나, 보전산지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최근제, 개정법률 >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 추진배경 산림휴양 활성화 및 불법 야영장 등의 난립에 따른 국민안전 제고
- 주요내용 ①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가능
- 시 행 일 2016년 1월 21일

2.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042) 481-4211

산림분야 전문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산림복지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년 3월 28일)으로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검색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추진배경 산림분야 전문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화 유도
- 주요내용 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
- 시 행 일 2016년 3월 28일

3. 벌채제도 개선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 481-8875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벌채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모두베기 최대면적을 50ha까지 허용하여 대면적 나지 노출에 따른 경관훼손,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면적을 20ha로 축소하여 벌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모두베기 벌채 시 단목존치로 인해 수목이 바람과 폭설에 부러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단목존치를 금지하고 군상 또는 수림대 형태로 존치하도록 하여 산림생태계와 유전자원이 다양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산림청, 국민 여론 수렴해 벌채제도 개선

2016년도 벌채제도 개선 내용

- 추진배경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벌채제도 개선
- 주요내용 ① 모두베기 면적 축소 : 50ha → 20ha
② 모두베기 존치 방법 변경 : 단목, 군상, 수림대 → 군상, 수림대
- 시 행 일 2016년 5월(잠정)

4.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범위 확대

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 481-4201

신(新) 기후체제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거주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주민이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를 희망할 경우 지역제한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2015년) 2,000대 → (2016년) 3,000대

다만, 국고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2016년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변경 항목

- 추진배경 신 기후체제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 주요내용 ① 거주지역 제한없이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참여 제한
- 시 행 일 2016년 1월 1일

5.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 481-4191, 4192

임업후계자, 독립가 등 임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시중금리와 연동을 위해 13개 사업에 대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에게 변동금리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임업인이 숲속야영장, 산악레포츠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 정책 > 통합자료실 > 2016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및 지원확대

- 추진배경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로 임업인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변동금리 적용 : 3.0% 이상 사업 (사립수목원 조성 등 13개 사업)
② 자금지원 대상 사업 확대 : 숲속야영장, 산악레포츠시설 추가
- 시 행 일 2016년 1월

6.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 042) 481-4094

국유림을 이용해 버섯, 산나물, 약초 등을 재배하는 임업소득사업자의 국유림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림 대부료 산정 규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국유림 가격의 10/1,000을 곱한 금액을 대부료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과 최근 공시한 해당권역의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 정책 > 소관법령 > 입법 및 행정예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현재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입법예고 시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 추진배경 국유림 대부료 산정방식의 합리화로 임업인 부담경감
- 주요내용 ① 국유림 가격 및 해당 권역의 임업총수입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부료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국유림 이용
- 시 행 일 2016년 6월 (잠정)

7.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허용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 481-4246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행위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수목장림을 혐오시설로 보는 국민정서와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수목장림의 조성을 제한하였습니다.
-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2016년부터는 산림보호구역 중 국민안전, 생태계보호, 상수원 수질 등과 관련이 적은 구역에서 수목장림의 설치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 정보센터 > 법령검색 >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관련 주요 법령개정 사항

- 추진배경 친환경 수목장림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산림보호구역내 설치 허용
- 주요내용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2
 -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1·2종)에서 수목장림 설치행위 허용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 미만의 수목장림과 3ha 미만의 사설수목장림 설치 가능
- 시 행 일 2016년 1월(잠정)